

환동해 지역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세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환동해 지역성의 복잡성 |
| II. 지역개념으로서 환동해 | V. 결론 |
| III. 환동해의 지역화·지역주의 | |

| 논문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세방화(glocalization)의 맥락에서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동해지역의 실재(reality), 즉 지역성(regionality)을 새로운 개념인 '지역성(regionness)'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환동해지역은 일반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범위다. 오늘날 이 지역은 다양한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방화 맥락에서 이 지역은 영토에서부터 네트워크 개념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본고는 환동해지역의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역화 과정을 중층적으로 관념화하고, 동시에 그 실재를 '지역성'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여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자기조직화되는 장(場)이다. 따라서 환동해지역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층구조를 가정하고, 근본적으로 세계는 총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지역의 실재를 국가 중심 단위의 실제적인 영토성뿐만 아니라 탈영토적이고 구성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1-000-H00001). 이 논문은 '2012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경희대 러시아학과 교수

적인 관계성을 함께 지닌 환동해지역의 중층성을 고찰하기 위한 개념화 작업의 일환이다.

▪ 주제어: 환동해 지역, 지역주의, 지역성, '지역성', 지역화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침투적 과정인 세방화(glocalization) 맥락에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동해지역의 실재(reality), 즉 지역성(regionality)을 새로운 개념인 '지역성(regionness)'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냉전체제의 붕괴,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 아시아권의 경제 발전 그리고 환동해지역 내 경제적 상호보완성, 지방개발에 대한 관심 등으로 환동해 지역의 협력이 금방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탈근대 담론과 연계되면서 실재를 넘어 담론(discourse)으로 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출범과 같은 지역주의 출범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를 추동하게 되면서 지역주의, 지역통합이 새로운 시대 담론으로 등장했다. 실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에서도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역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아시아 하위지역으로 환동해지역이 관심¹⁾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기대되었던 환동해 지역주의는 20여년이 지난 오늘

1) 이런 분위기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시, 울산시 등 한국의 동해연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환동해권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에 의한 기능별 협력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1995), 한국환동해학회(1997)가 창립되는 등 1990년대 환동해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지대했다. 하지만 대부분 논의에서 환동해 협력 가능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에 대한 당위적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그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통망,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기능적 수준의 협력조차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종종 국제적과 지역내적 측면에서 제시되곤 한다. 즉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들의 양자주의 규범이 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내적으로는 북한 요인과 각국의 서로 다른 국익 계산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맹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잠재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의 구도의 범위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시각차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생각하는 지역주의의 범위는 아시아 전역이다.²⁾ 중국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과의 연계망을 고려할 때 아세안과의 지역협력 강화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정하는 아시아 지역구도의 1/4에 해당하는 환동해 지역주의가 중국 정치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권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일본의 지역 개념은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성된 동아시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과거 일본 주도의 대동아 공영지역구상에서도 여실히 표출된 바 있다. 또한 중국·한국·러시아 등 불편한 국가들을 다루는 것 보다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다(문정인 2006).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지역 구상에 또는 환동해 지역구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환동해권의 중심은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일 수밖에 없다. 근대사에서 이 지역은 영토 확장과 세력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을 상회하며, 동해로의 출로에 관심을 가진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인구만 하더라도 6천 5백만에 이른다(김원배 2010, 4-5). 또한 중국의 성장을 감안하면 동북 3성의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는

2)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종종 이른바 ‘동아시아 담론’을 수행하느니 차라리 동서방이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쑨거(2009),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제 52권, 제1호, pp. 13-14. 예컨대 중국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모두 접하고 있다 보니 동아시아라는 틀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환동해지역의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 환동해 지역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 20여 년간 환동해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그 수준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지역 협력이 아직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고한 민족주의, 근대화의 미완성과 같은 환동해지역 협력의 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리지만 동북아 지역이나 환동해지역에서 지역주의의 기초는 마련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FTA 관련 논의, 교역과 투자의 확대,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건설,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날 환동해지역에서는 민족적 정체성, 이슈 정체성, 기능적 정체성 등 이중적·삼중적 정체성이 상호 관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이철호 2009). 기존의 지역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성되고 있다. 기능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정치안보적 요소, 제도화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동해 지역주의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주의, 중층적 지역주의를 논할 때는 기존의 개념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주의의 평가에서 경제(시장), 안보(국가), 시민사회(사회)의 행위자 문제, 정치와 경제적 분야의 관련성과 같은 요인들은 환원적 수준이나 선후 문제로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하위단위인 지방이 국경을 초월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환동해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가 국경을 초월한 교류를 증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다. 이런 새로운 단위에 대한 인식은 영토성을 가정한 국가중심모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제 지역 범위 수준에서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위지역이라고 하는 수직적 위계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지방간 결합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단위를 인식해야 한다(多夏秀敏 1995).

환동해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에 따른 개념화가 필요하다. 지역 인식에는 국가중심단위(state-centric)의 영토성(territoriality) 패러다임에서 다중심(multi-centric) 단위의 탈국가 네트워크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인식론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오늘날 민족국가의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은 지역의 고정성, 주체성뿐 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단위들의 상호작용, 관계성에 의해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I. 지역 개념으로서 환동해

지난 20여 년간 ‘세방화(glocalization),’³⁾ ‘지역화(regionalization)’와 같은 용어는 시대적 특성을 묘사하는 강렬한 메타포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대중적 서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다양한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동원되면서, 그 자체로서 모든 사회적·공간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자 구조이며 모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현상을 해석하는 전지전능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는 설명과 이해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상이한 관점·이론·개념을 상호 연결하고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시대적 담론 자체가 되어 버렸다.⁴⁾

3) ‘세방화’ 또는 ‘지구지역화’라 명명되고 있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은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 두 경향이 상호 보완적이고 침투적인 동시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표현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일본 기업의 토착화(土着化) 전략을 의미했는데, 사회학자 로버트슨(R. Robertson)에 의해 학문적으로 이론화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내셔널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기능이 한편으로는 EU 창설, WTO 체제 출범 등과 같이 글로벌 스케일로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을 통하여 개인이나 로컬 스케일로 하강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기능과 권한이 상위 및 하위 스케일로 동시에 이행하는 현상을 세방화라고 부른다. Eric Wyngedouw(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Cox, K. R.(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pp. 137-166.

4) 글로벌화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세계가 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되고 있는 구조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를 초월하는 자본, 노동, 문화, 정보의 이동으로 생

세방화 시대에서 지방의 횡국가(transnational) 교류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으로서 환동해권을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유럽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동남아 국가연합과 같은 지역프로젝트의 분출은 새로운 인식 단위로서 지역이란 용어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그 흐름의 연결선상에 환동해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 지역은 세방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근대 공간의 근간인 영토성의 원칙이 점점 약화되어가면서 지역은 자연주의적 개념을 넘어 인문사회 개념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철호 2009, 83). 이제 정치사회 존재 방식이 공간 편성의 층위 차원의 문제로 다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연구 단위인 ‘지역’은 실재(實在)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의 장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 오늘날 지배적이다.⁵⁾ 따라서 환동해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시각에서 정해진 고정된 지역개념이 아닌 역동적이고 관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변경(邊境)적 공간개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즉 환동해지역을 물리적·절대적 공간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개념화하고, 재현,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환동해 공간의 개념적 그리고 현실적 상호작용의 변화과정, 그 변화과정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

활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양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대체로 글로벌화라는 용어는 ‘현재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과정이 지구 위의 다양한 인간 및 환경을 연결시키고, 통일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박경환(2011), “글로벌, 로컬, 스케일 -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pp. 55-56.

5) 인간은 사물들의 관계적 위치와 이들 간의 관련성으로 공간을 인식한다. 하지만 근대 학문체계에서는 공간은 관계성으로서가 아니라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영역, 절대적 역역으로 환원되어 인식되었다. 공간과 사물은 분리되어 인식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한 언어들도 공간(시간)적 언어와 사물의 언어로 분리되었다. 실제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며 항상 그곳에 관계하는 사물들과 함께 생성·발전·소멸하게 된다. 기후·식생·산업 등이 입지해 있는 자연과 인문 환경적 공간이며, 국가행정구역 및 사회집단 거주지가 펼쳐져 있는 사회적 공간이며, 인간의 감정과 애정이 깃들여져 있고, 이를 표현하는 상징과 기호들로 가득한 문화적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장(場), 권역, 지역, 처(處), 터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공간은 절대적 공간(선형적인 공간과 사물 분리), 상대적 공간(사물들의 개체가 위치 지어진 공간), 권력적 공간(사물 등의 관계가 형성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의 총체로서 장(場)이다. 권세은(2010),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환동해지역의 설정,” 『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pp. 32-33.

이 중요하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다층적이고 다성(多聲)적인 관계의 장(場), 유기체적 네트워크로 짜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정 공간의 다양한 상호관계성의 범주화는 다수의 동아시아를 가정할 수 있다. 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형성되는 이런 범주화는 환황해권, 환동해권, 대륙권, 해양권 등 다양한 아시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범주는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이다. 동아시아라는 공간은 문명, 인종, 종교, 문화, 물류, 인구이동 등 각 수준별로 형성되는 중층적 유동공간으로 다양한 구획이 가능하다(박상수 2010, 97). 따라서 지역은 한편으로는 경제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횡국가 행위자 등장으로 인해 다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과 전개과정의 차이는 크지만, 유럽에서 형성되고 있는 ‘통합된 유럽’과 ‘지역들의 유럽’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하나의 아시아와 다층적인 하위 지역들의 아시아가 중첩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란 그릇이 담고 있는 사회관계는 국가 하위의 관계일 수도 국가 상위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탈근대 시기 새로이 대두되는 공간은 ‘지역들로 이루어진 유럽’에서 보듯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가 하위의 지방들(localities)의 원심력이 국제적으로 합쳐져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초국가 지역이다(이철호 2007, 9). 따라서 지역이란 그 관계성에 따라 국가 하위의 관계일 수도 국가 상위의 관계일 수도 있다. 환동해지역 공간은 국가 단위나 국가 하위 단위의 활동 공간이면서 동시에 국가 상위 단위이고, 또한 지방 차원에서 지방간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즉 지방의 원심력이 합쳐져 형성된 새로운 차원의 초국가 지역의 총합의 장인 것이다.⁶⁾

오늘날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는 지역의 수준의 다원화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 상태의 환동해 공간은 지방(local)·국가(national)·지역(regional)·글로벌(global) 스케일이 중층화되고, 현실의 정치적 과정

6) 지역은 APEC과 같은 메가지역(mega-region), EU 같은 거대지역(macro-region), ASEAN 과 같은 미시지역(micro-region), 환동해, 환황해 지역과 같은 하위 지역(sub-region) 등과 같이 다양하게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과 관련하여 거시 지역주의(macro-regionalism), 하위지역주의(sub-regionalism), 미시지역주의(micro-regionalism)와 같이 다층적인 지역주의가 병존하게 된다.

과 실천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국가(nation)를 축으로 하는 국제(international)·국가(national)·국내(intranational) 스케일로 지역성을 개념화할 수 없게 되었다. 현실에서는 지방에서 글로벌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스케일이 중첩된다. 지리적 스케일은 구체적인 사회적·공간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⁷⁾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로컬 스케일에서 경험되지만, 동시에 로컬 스케일을 넘어 상위 스케일에서 정치경제의 동향과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세계경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일례로 오늘날 환동해지역의 지방에서 발생한 로컬 수준의 사건이 종종 국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쟁, 내전, 공해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문제는 로컬 스케일에서 조정할 수 없는 대립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현대는 글로벌-국가-지역-지방이라는 다양한 수준의 자율화가 병존하는 ‘공간의 다층시대’로 볼 수 있다.

환동해지역은 일반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범위로 정하고 있다. 광의적으로는 몽골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방과 중앙의 관계, 지방간 관계가 급속히 결합되는 맥락에서 경직되게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역을 행위자와 공간으로 개념화(Schmitt-Egner, 2002)하면 환동해는 세방화 시대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역(region as actor)’과 ‘행위 공간으로서의 지역(region as arena(action sp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역 자체(region per se)와 시공간적 복합물로서 지역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연구에서 정치학의 경우 주로 행위단위

7) 예컨대 글로벌과 지방 사이에 위치한 국민국가 스케일은 전쟁이나, 외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그 스케일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을 갖는다. 국민국가 스케일은 근대 유럽이라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형성된 것이고, 유럽 연합이라는 초국가 수준의 스케일은 1990년대 이후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같은 시기에 소련은 이제까지 국가보다는 하위 단위인 민족성(ethnicity)을 유대로 하는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스케일이란 특정의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재편되며 소멸하는 것이다. 미즈우치 도시오 편(2010),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p. 58.

로서 지역(the region as an action unit)에 초점을 두게 되고, 지리학에서는 행위공간으로서 지역(the region as an action space)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복합물로서 지역시스템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슈미트-에그너(Schmitt-Egner 2002, 179-200)는 지역시스템(Regional System)의 요소로 ‘지역구조(Regional Structure),’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지역행위자(Regional Actor)’ 그리고 ‘환경(System-Environment)’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구조는 행위공간(Action space)과 행위단위(Action-unit)로 구분되는데, 행위공간은 지역의 활동무대로, 행위단위는 지역을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행위공간은 구조의 내용으로서 물질(사회경제적), 상징(문화적), 제도(법적·정치적) 등을 형성하는 지역의 잠재력과 능력을 의미한다. 지역프로그램은 지역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물질·상징·제도를 재생산하는 데 관여한다. 물질 재생산은 사회경제적 산출 능력에, 상징 재생산은 문화적 정체성 개발 능력에, 제도 재생산은 행위주체로서 법적·정치적 일체성에 관여하게 된다. 행위자는 지역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 즉 집단행위자·사회행위자·개별행위자를 의미한다. 이들 행위자의 수직적·수평적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따라 지역 시스템의 환경이 형성된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안하든 환동해지역에서 근대와 탈근대, 냉전과 탈냉전의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정책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실재로서 장(場)이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역학 관계가 활발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초국가적 지역과 횡국가적 지역, 하부 지역을 동시에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권세은 2010, 26).

오늘날 근대적인 영토개념은 경계 내외적 측면이 와해되면서 고정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논의 수준에 따라 규정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은 행위자로서 또는 공간으로서 지방-국가-지역-글로벌 수준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방화-지역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행위자와 공간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지역은 유동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III. 환동해의 지역화·지역주의

지역주의는 행위 공간, 행위자, 지역프로그램, 국제질서 성격 등 구성요소의 해석에 따라 구 지역주의와 신 지역주의로 개념화되기 하고, 좀 더 미시적으로 탈근대 지역주의·초국가 지역주의·황국가 지역주의 등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⁸⁾ 오늘날 지역은 이중 지역화⁹⁾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간 및 대륙 간 통합과정인 거시적 지역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경 협력 및 지방 간 협력인 미시적 지역화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 측면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하고 동시에 국내적 측면의 지방 분권화에 기인한다. 이런 과정에서 환동해지역에서의 미시적 지역화 논의는 1990년대 초 하위 지역(subregion)인 지방 간 경제협력 논의와 관련되어 시작되었다.

오늘날 지역주의는 국가 단위의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1950-1960년대 지역주의가 국제관계론의 주제였다면,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역주의는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신지역주의는 기존의 국가단위로 조직된 협력 형태보다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에 한층 깊이 연계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8) 즐레카는 헤튼의 신지역주의를 평가하면서 ‘공간이 지역적 접촉성(regional contiguity)을 초월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주의의 과정에서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보다 지리적 접촉성과 지리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Zoleka 2006, 113-124). 슈미트-에그너(2002, 188-190)는 지역주의의 유형을 구지역주의(old regionalism),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탈근대 지역주의(postmodern regionalism), 초국가 지역주의(transnational regionalism), 국제적 지역주의(international regionalism) 등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9) 지역화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지역주의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화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교류를 포괄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결부될 수 있는 사회와 시장주도화 과정에 속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유럽이 실질적으로 통합 되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지역주의는 지역 공간에서 형성되는 정치 과정으로 국가 대 국가의 목적 지향적인 의도적 협력을 의미한다. 지역화와 비교하면 지역주의는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역을 만든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Alice D. B(2009), “Regionalism’s Multiple Negotiations: ASEAN in East Asi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Issue. 3, pp. 345-347.

상호의존과 문화적 정체성, 국경을 매개로 한 교류프로젝트 등에 따라 비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횡국가 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분석수준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의 다층성을 전제 하고 있다(김철호 2007).

환동해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 중국의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측이 두만강 하구의 황금의 삼각지대를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당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구정모, 이현훈 1995, 20). 한편 지방 정부들은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지방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의 지방은 지방자치제도 부활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환동해지역의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은 자매결연과 같은 양자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왔다. 외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이라는 보호막이 약화되고 자유경쟁이 확산되자 각국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근 지방정부들과의 월경적 협력을 도모코자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¹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경제권’, ‘한일해협경제권’ 그리고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러시아, 보다 넓게는 몽골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면서 구체화되어 갔다. 다양한 지방간 자매결연과 같은 양자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다자간 협력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환동해지역의 횡지방적 네트워크의 사례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¹¹⁾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¹²⁾ ‘환동해권지방정부지

10) 환동해지역의 지방 네트워크 실태에 대해서는 이동형(2011), “환동해권 지방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안-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권세은 외, 『동해의 재인식과 환동해학의 모색』,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pp. 177-201; 홍성우(2011), “환동해지역 지방정부의 국제화 현황에 관한 탐색적 고찰,” 위의 책, pp. 204-229; 구정모, 이현훈(2001), “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 상위지역협력과 하위지역협력간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2호; 이정남(2006),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의 역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참조.

1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3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한·중·일·러 4개국의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시작되었고,

사·성장회의,¹³⁾ ‘한일해협권지방정부회의’¹⁴⁾가 대표적이다.

환동해 연안 지역에서 국내적 지역주의의 형성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¹⁵⁾ 일본은 탈냉전, 국제화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본 서쪽 연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연안 지역의 교통과 통신 체계 등 기반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환동해지역의 지방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해 왔다. 이를 위해 일본 서쪽 연안 지방정부들은 ‘일본해(동해)연안지역진흥연맹(1964),’ ‘환일본해(환동해)교류서일본협의회(1993)’ 등의 협의체를 결성하여 내부적 협력방안을 강구하였다.¹⁶⁾

1996년 경북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4개국 29개 단체가 참여하여 연합을 결성하여 ‘연합현장’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http://www.neargov.org>. (2012년 3월 20일 검색)

- 12) ‘환동해거점도시회의’는 환동해지역의 연안 도시들의 국제협력과 경제교류 및 관광개발을 위해 1994년 결성된 조직이다. 현재 회의에 한국에서 포항, 동해시, 속초시, 일본에서 니가타와 돗토리, 요나고, 중국에서 도문, 훈춘, 연길,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가 참여하고 있다.
- 13) 환동해권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응하고 동해에 면한 지방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길림성, 돗토리현과 연해주가 참여해 1994년 출범하였다. 1999년 몽골 튜브도가 회원단체로 가입함으로써 5개국 5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도는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를 지역 차원에서 발전시켜 환동해권 지역의 6개국 지방정부 및 지역(남·북한 동해안, 일본 서안, 러시아 극동, 몽골 중앙현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 14) ‘한일해협권지방정부회의’는 한일 해협의 지리적 이점, 즉 황해권과 동해권이라는 두개의 해양 공간과 두개의 주요 국내 발전축(서울-부산, 규슈-도쿄)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의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형성되었다.
- 15)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환동해에 대한 관심은 ‘일본해학’으로 체계화되었다. 탈냉전과 글로벌화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형태로 개발하는 탈근대적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해학은 ‘기획’의 속성이 강하다. 일본해학은 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환경보존, 지방적 차원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환동해의 지역 정체성을 상호 관계성으로 설정하고 국제성, 지방성을 포괄하면서 초국가적, 다차원적 경계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다. 권세은, 앞의 논문.
- 16)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니가타현은 19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과 교류·협력 관계를 구체화했으며,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의 운영과 함께 ‘동북아시아경제발전국제’를 매년 개최하면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야마현은 요녕성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대련에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부 연안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해 중국발전을 도모해 왔다.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화남지역(1980-1990년대)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외개방정책이 이후 산둥, 요동반도(1990-2000년대) 및 동북 3성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동부 연안 지역은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발전 축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동북 3성, 특히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환동해경제권으로의 편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동북 진흥 추진 종합계획’, ‘장지투(長吉圖, 장춘-지린-투먼) 개발사업’ 기반으로 공업과 자원개발 등 동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성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 한반도와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하고, 나진·선봉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나진항 사용권 획득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러시아의 환동해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치면서이다. 극동지역에 매장된 지하자원들이 러시아의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기대 속에 환동해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극동 지역의 개발을 도모코자 했다.¹⁷⁾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체제 변화 과정에서의 경제난, 중앙차원에서의 전환기적 특성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화되지 못했다. 오늘날 인구 유출 문제, 중국인의 불법체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러시아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다자간 협력기구인 NEAR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위탁으로 『환동해 무역저널』을 발행하면서 환동해권 IN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돛토리 현 역시 동해와 면한 일본 서안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망을 정비하는 등 환동해권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강원도와 길림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형, 전게서.

17) 이에 따라 러시아는 그동안 ‘블라디보스토크선언(1986)’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1988)’을 시작으로 ‘나홋카 특별경제구역 지정(1986)’,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구역 계획(1991)’, ‘남부 연해주개발구상(1993)’,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1996)’,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프로그램(2002, 2007)’,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2003)’, ‘러시아 교통전략 2020(2005)’ 등의 다양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APEC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통합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전략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러시아는 이 지역을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일본, 한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환동해권의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환동해지역에서 에너지·자원 공급지, 교통·물류 인프라의 결절점일 뿐 아니라 지역안보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 환동해지역의 지방 간 교류와 협력은 외적으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 부활이라는 내적요인 등이 어우러짐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국제통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양자 간, 다자 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관계를 형성하여 대외 교류·협력에 매진하였다(이동형 2009).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외 지방정부, 즉 일본, 중국, 러시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발전시켰다.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지역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중심의 소지역주의는 국제화라는 국제환경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의 정치·경제공동체 부재,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경쟁력 강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동해지역의 다자 간 협력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에서 중심은 한국 동해안의 지방정부들이었다. 당시 한국 동해안 연안 지방정부들은 세계화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지방정부들과의 양자간·다자간 네트워크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각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환동해의 경제권이 자

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자간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일본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침체와 함께 열기가 식어갔으며, 중국, 러시아와 몽골은 국가주의적 모델, 발전주의적 모델에 따라 투자 유치에만 열중함으로써 오늘날의 다자간 협력네트워크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게 되었다.

환동해 지역주의의 특성으로는 낮은 제도화 수준, 시장주도, 국가주의적 지역주의로 볼 수 있다. 아직 최소주의적 행정조직과 기구, 회원국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느슨한 대화 공동체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무했던 지역협력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차원에서나마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동형 2011).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지역 국가들이 형성한 다자회담, 지방정부의 협력네트워크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환동해 지역화는 지역의 지방 및 도시들의 행위자 측면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 간 그리고 위계적으로 복합수준의 네트워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형태론적으로 횡단의 논리, 지리적으로 근접의 논리에 의거하고 있어 환동해 지역의 제도화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동해 지역주의는 그 초기적 형태로 한·중·일·러 각각의 국내차원의 탈근대 지역주의 또는 신 지역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 주로 산업단지 조성 과 같은 물질 재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차원의 지역주의이다. 하지만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개발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신 지역주의와 유사하지만 아직 분권화된 제도적 재생산과 문화적 재생산 활동 까지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 환동해지역에서의 지정학·지경학적 관계는 많이 변화해 왔다. 가시적으로 환동해 지역협력이 제도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은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동해 지역에서는 주로 중앙차원에서 보다는 지방차원에서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행위

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행위자 뿐 아니라 다른 수준의 행위자와의 교차적인 교류를 증대시키고, 쌍방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다.

IV. 환동해 지역성의 복잡성

환동해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창발되는 장이다. 이 지역은 구성 요소들의 활동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장이다. 또한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local-national-regional-global)와 다양한 스케일(micro-meso-macro scales)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마치 찬합형태¹⁸⁾로 위계성 및 개방성을 띠는 복잡적응시스템¹⁹⁾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의 다양한 형태의 부분은 시간상 선후 관계도 아니고 한 부분이 다른 것을 결정하는 일방적 관계도 아닌 상호 침투하고 상호 전환하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지역은 역사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잡해지고 새로운 특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하위 수준(구성요소)에는 없는 특성들이 상위 수준(전체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 한다. 지역의 속성이나 다양한 현상들은 이런 창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환동해지역에서 8, 9세기 상호 관계성, 근대의 상호 관계성, 오늘날 상호 관계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18) 시스템의 위계구조(hierarchy)는 각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수준에서 고유한 권리를 가진 아전체(亞全體, sub-whole) 즉 홀론(holon)이다. 이 구조는 두 경향 즉 자기주장경향(self-assertive tendency)과 자기초월경향(self-transcending tendency)을 동시에 띠어 자기의 개체성을 주장하면서 준 자율적 전체(quasi-autonomous whole)로서 행동을 하고, 동시에 다단계적인 위계구조에서 보다 큰 전체에 통합되는 부분으로 행동하게 된다. Arthur Koestler(1994), 『야누스-혁명적 홀론이론』, 최효선 역, 범양사; 권세은(2004),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p. 135.

19) 복잡적응시스템은 각 부분들은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 및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구조와 기능으로 진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권세은(2004). 상계논문. 참조.

지역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지역지리적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닫힌 공간, 실제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영토성을 기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과 지역을 하나의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관계적·과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과정의 한 국면으로 파악하는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vism)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그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와 구성주의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주의는 현실 세계가 실재하며 파악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반면 구성주의는 현실 세계의 존재론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다중의 지역, 구성된 실재를 가정하고 있다. 기술적 접근은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지역의 실재나 변화하는 관계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사회구성론적 접근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만 자연지리적 영토적 특성과 인과적이고 실증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지역의 실재를 파악함으로써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환동해 지역에서 지방의 원심력은 지리적이고 동시에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 하위수준에서 국제수준 그리고 횡국가 수준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연구에 있어서 지역을 단일적으로 표상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간적 집합체와 사회적 집합체를 구분하고, 지역을 관념하는 데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인식(spatial notion)과 그 역사적 실체(historical practice)를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철호 2005, 78). 따라서 실재론적인 자연지리적 영토적 속성과 관계론적인 사회구성적 속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과 구성주의적 설명(constructive explanation)의 간극을 메우고 양쪽의 논리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관계적 실재론(relational realism)’이 설명력을 갖게 된다. 이 실재론은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실재론, 인식론적(epistemological)으로 상대론을 가정한다.

관계론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든 아니든 환동해 지역성 자체는 우리들의 인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조직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성은 다양한 층들에

서 발현되기에 구체적 층으로 환원될 수 없게 된다. ‘자연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술어는 상이한 종류의 사건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상이한 종류의 기제(mechanism)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방체계인 지역에서 사건의 발생에는 이들 술어들의 몇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두 기제들은 동시적인 것이지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둘 모두 기제이지 사건이나 행위가 아니다. 즉 민족주의나 역사문제 등과 같은 사건은 동시적이고 상호 관련되기에 일련의 기제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양한 수준의 중층성, 다양한 행위자,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은 인식론에서 출발하게 된다. 모든 지역 다양한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연구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간을 존재케 하는 실재(real)영역은 ‘개념’,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현실(actual)영역이나 경험(empirical)영역이 아니며 이론적 개념이나 프레임워크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정될 따름이다.²⁰⁾ 중층화(重層化)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학문적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내부 상호작용이 보다 큰 전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궁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를 벗어나 현상을 존재론적 층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층위를 고유한 분석수준으로 삼아 고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0)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개념은 바스카(Roy Bhaskar)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참고하였음. 그의 비판적 실재론에 따르면 존재론적 실재론, 인식론적 상대주의 그리고 판단적 합리성이 결합되고 조화된다. 그리고 자동성(intransitivity), 초사실성(transfactuality), 층화(stratification)의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존재론을 옹호하고 있다. 즉 현상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세 가지 입장이 나타난다. 인식론으로 환원 불가능한, 그리고 현상을 발생시키는 궁극적인 배후 메커니즘인 실제적인 것(the real)과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적인 것(the actual)과 관찰 가능한 경험적인 것(the empirical)의 영역들을 구분하고, 발현(emergence)을 인정하는 층화적이고 분화적인 존재론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사회를 관계적이고 발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마가렛 아처 편(2005), 『초월적 실재론과 과학』, 이기홍 역, 한울, pp. 18-19; 이기홍(1998), “실재론적 과학관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경제와 사회』, 제39호, 가을, pp. 183-185.

이런 맥락에서 ‘영토성(territoriality)’에 대한 대응물로서 헤튼(Björn Hettne)이 제안한 ‘지역성(regionness)’은 다원화·다층화되고 있는 지역의 실재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성의 개념은 지역화의 자연적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실재의 특성을 보다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김철호 2007, 31). 슈미트-에그너(Schmitt-Egner, 2002)는 행위자 분석 수준의 위계성인 ‘행위자성(actoriness)’을 헤튼의 지역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헤튼의 지역성 개념²¹⁾에 의하면 환동해 지역성을 다음과 같이 수준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연지리적 지역 공간(regional space), 전(前) 지역구역 단계인 원형공간으로서 환동해지역이다. 두 번째 단계로서 주로 안보측면에서 상호 작용하는 초기 지역인 지역 복합체(regional complex) 수준이다. 근대 이후 환동해지역에서의 국민국가 형성기적 특성이 이 수준이다. 세 번째 단계로서 환동해지역에서 지역 사회가 형성되는 단계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조직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단계이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행위자가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시지역(micro-region)을 형성하는 상태이다. 이 수준에서 환동해지역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공식 지

21) 헤튼은 지역성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Björn Hettne and Fredrik Soderbaum 2000, 462-468). 첫째 수준은 자연 지리적 단위로서 지역 공간, 사회에 의해서 조직되지 않는 원형 지역(proto-region)인 전 지역구역(pre-regional zone) 단계이다. 둘째 수준은 다양한 요소들이 지방간 안보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초보적 사회시스템으로서 초기지역(primitive region)인 지역 복합체 단계이다. 사회적(Sociological) 수준으로 지역성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며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지역에 해당한다. 셋째 수준은 지역사회(regional society)로서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단계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조직된 협력이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지역을 형성하는 조직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화 단계이다. 여기서 진정한 지역은 잠재적 측면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 등 행위자의 다양화가 진행되며 지역화가 다차원에서 진행된다. 또한 황국이 네트워크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시지역(micro-region)이 존재한다. 지역 조직의 제도화는 공식지역(formal region)과 사실상 지역화가 진행되는 실제지역(real region)이 혼재된 상태로 나타난다. 넷째 수준은 지역 공동체(regional community)로서 공식지역과 실제지역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행위 주체로서 변화하는 단계로서 지역 통합을 향하는 지역화 수준(regionalisation)이다. 다섯째 수준은 정책 결정 구조 및 지역 정체성을 갖는 지역 국가(region-state)로서 초국가체 단계이다.

역과 사실상 지역화가 진행되는 실재지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환동해지역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행위 주체로서 지역 통합을 향하는 지역화 수준(regionalization)의 단계, 지역 국가(region-state)로서 초국가체(supernational entity)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구분에 의하면 현 단계의 환동해지역의 지역성의 수준은 아직 초기지역인 지역 복합체 수준과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화 수준이 중첩된 단계이다. 또한 미약하나마 행위 주체로서 지역 통합을 향하는 지역화의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에 있다.

환동해 지역성을 관념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지역인 지역 복합체 수준의 이해는 주로 공간 단위에 대한 전통적 인식, 즉 '개인-국가-국제'라는 3단계의 분석수준에 기초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고정-폐쇄-권위-위계-구심력 등의 속성을 지닌 근대 '영토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환동해지역에서 조직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화 수준에서 공간 패러다임의 초점은 '영토'에서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된다. 유동-개방-수평-분산-원심력을 속성으로 하는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부상엔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동인이 초국가적인 것에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이철호 2007, 16-17). 하지만 국가화-제도화-지역화 수준이 중첩되어 있는 환동해 지역성은 중층적일 수밖에 없다. 이 지역성을 주권 국가 단위 속에 갇혀버린 공간, 국토와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영토성 개념으로 환원하여 이해 할 수는 없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성을 파악하는 네트워크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환동해 지역에서는 편협한 민족주의, 국경,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없는 것처럼 객관화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글로벌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 영역을 절대화하고 민족국가의 영토성을 중심으로 환동해지역을 객관화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을 이야기하지만 환동해지역에서의 국제관계는 아직까지 현실주의적인 세력균형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단지 그 구성요소가 분해-재구성되면서 그 논리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지역구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변적이다. 지역적 기체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존재 조건을 가진 것이며, 그 조건들은 어떤 공간 및 시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공간 및 시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의 실재(reality), 즉 지역성의 이해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각 변수들의 복잡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지역성을 논할 때 지역화 개념은 자연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기제들의 복잡한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화는 층화(stratified)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층화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제이다. 그런데 이런 기제를 구체적인 사건이나 제도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것은 ‘구체성을 잘못 지은 오류’라 볼 수 있다. 관계론적 실재론에 의하면 환동해지역의 실재는 다층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영역보다 크거나 같고, 현실적인 영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환동해 지역성을 논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 영역을 일치한다고 가정하면서 특수한 형태의 환동해 지역성을 보편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V. 결론

오늘날 환동해지역은 단위적 측면에서 수직적 위계화 과정, 기능적 측면에서 수평적 재구조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격 즉 지역성(regionality)은 중층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성이 다층적이며 다기능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역화, 지역주의 또한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지역화의 복합적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각의 층위 즉 글로벌, 국가간, 지역간 단계에서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개념인 ‘지역성(regionness)’은 다원화·중층화되고 있는 지역의 실재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환동해지역에서는 지역성 단계는 민족국가 형성 수준에서 지역화 단계까지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환동해 제국들의 강고한 민족주의, 영토분쟁, 국가주의적 지역화 등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게 된다. 동시에 초보 수준이지만 환동해지역에서 이중 지역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FTA 관련 논의의 전개, 교역과 투자의 확대,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북핵의 불용인 등과 같은 국가 간 거시지역화 과정과 지방 수준의 횡국가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미시지역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구성원들은 일정 정도의 동반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성'의 중층화 과정에서 환동해지역에서 지역주의는 과거로의 회귀에서 미래의 기획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국가성이 지역성보다 강한 이 지역에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은 여전히며, 민족주의 또한 곳곳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냉전 흔적들이 현실과 결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대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경제적 의존도 증대, 횡국가적 기구 출현, 시민단체 역할 증대 등으로 지역의 단위의 위계화, 행위자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를 지역의 기본단위로 당연시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 따라서 행위자와 기능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공간으로서 '지역'을 관념하고 이에 따라 환동해 지역을 재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근대 국민국가의 표상이었던 영토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 초국가주의와 지역주의의 추세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또한 중요해졌음을 의미 한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적응하여 구성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지역은 특정 요소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잡적응체계로서 환동해는 존재론적으로 창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층구조를 가정하고, 근본적으로 세계는 층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환동해 지역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주의는 패권주의, 민족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공동 번영 프로젝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동해 지역의 실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응능력을 지닌 인간사회가 어떤 환동해 지역주의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지역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가이다.

| 참고문헌 |

- 구정모, 이현훈(2001). “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 상위지역협력과 하위지역협력 간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2호.
- 권세은(2004).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 권세은(2010).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환동해지역의 설정.” 『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 권세은(2011).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 김원배(2005).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연구원.
- 김원배(2010). “환동해권과 동해안 발전전략.” 『2010년 제 4회 동해안 발전포럼』. 울산발전연구원.
- 多夏秀敏(1995). “環日本海研究への一視覚:國際政治分野.”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SEEC)창립기념 Seminar 발표문.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http://www.neargov.org>). (2012년 3월 20일 검색)
- 마가렛 아처외 편(2005). 『초월적 실재론과 과학』. 이기홍 역. 한울.
- 문정인(2006). “동북아 지역주의, 가능한가?” 『동아시아 브리프』. 통권 3호.
- 미즈우치 도시오 편(2010).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 박경환(2011). “글로벌, 로컬, 스케일 -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 박상수(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동아시아연구, ‘초국가적 공간’으로부터 접근하자.” 『아세아연구』. 제53권. 제1호.
- 쑤거(2009).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제 52권. 제1호.
- 이기홍(1998). “실재론적 과학관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경제와사회』. 제 39호. 가을.
- 이동형(2009). “환동해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환동해리

- 뷰』. 제5권. 제2호.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 이동형(2011). “환동해권 지방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안-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권세은 외. 『동해의 재인식과 환동해학의 모색』.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정남(2006).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의 역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 이철호(2005). “동아시아 공간 인식에 있어 해양과 대륙.” 『세계정치』. 제26권. 제2호.
- 이철호(2007). 『부산발전과 동북아 구상: 지역협력의 공간 여건과 그 전략적 함의(연구결과 보고서)』. 부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 이철호(2009). “국제관계의 공간적 변용과 지역개념의 재고.” 『국제관계연구』. 제 12권. 제2호.
- 최장집(2004). “동아시아 공동체 이념적 기초.” 『아세아연구』. 제47권. 제4호.
- 홍성우(2011). “환동해지역 지방정부의 국제화 현황에 관한 탐색적 고찰.” 권세은 외. 『동해의 재인식과 환동해학의 모색』.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Alice D. B(2009). “Regionalism’s Multiple Negotiations: ASEAN in East Asi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Issue. 3.
- Hettne, Björn and Soderbaum, Fredrik(2000). “Theorising the Rise of Regionness.” *New Political Economy*. Vol. 5. No. 3.
- Koestler, Arthur(1994). 『야누스-혁명적 홀론이론』. 최효선 역. 범양사.
- Schmitt-Egner, Peter(2002). “The Concept of ‘Reg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Notes on Its Reconstruction.” *European Integration*. Vol. 24. No. 3.
- Swyngedouw, Eric(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Cox, K. R.(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 Zoleka V. Ndayi(2006). “‘Theorizing the Rise of Regionness’ by Bjorn Hettne and Fredrik Soderbaum.” *Politikon*. Vol. 33. No. 1.

| 논문투고일: 2012년 04월 05일 |

| 논문심사일: 2012년 04월 07일 |

| 게재확정일: 2012년 04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1 (2012)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ity of East Sea Rim Region

Se-Eun Kwon

(Dept. of Russian, Kyung Hee Univ.)

This paper aims to shed some light on the "regionality(reality of a region)" of East Sea Rim region which is simultaneously influenced by the glocalization process - the recursive relations betwee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 territorial boundary of East Sea Rim region includes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western coast of Japan, the Northeastern area of China, and the far-eastern region of Russia. East Sea Region has been experienced the dynamic regionality. Researchers and specialists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now face to the necessity of conceptualizing this new feature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they need to conceptualize East Sea Rim region as a multi-layered region experiencing multi-dimensional regionalization process, which is recently discussed as a new concept, "regionness" in the field of regional studies.

When a certain region enters into the process of glocalization, the region needs to be recognized as a field in which self-organization process(active and dynamic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s and the objects) is continuously operating. Therefore, for fully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East Sea Rim region, it is pre-requisite to recogniz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ed and stratified feature.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a certain region, it is necessary to shift our

epistemological paradigm to a new one that implies trans-national and relational network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Key words: East Sea Rim Region, Regionalism, Regionality, 'Regionness', Regionalization